

통권 제78호

KIPF 조세재정 브리프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정립

윤성주 연구위원
김문정 부연구위원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목 차

I. 들어가는 글	3
II. 지역별 노동시장 이질성 및 일자리 정책 현황	4
III. 지역 일자리 정책 관련 사례조사	8
IV.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	11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윤성주 · 김문정 · 김정훈,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I

들어가는 글

- ▶ 일자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혁신을 통해 창출하고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일자리 정책에 있어 지역 및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의 역할에 크게 의존한 측면이 존재
-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일자리 정책에 있어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 및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해 살펴봄

II

지역별 노동시장 이질성 및 일자리 정책 현황

1. 지역별 노동시장의 이질성

- ▶ 지역별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결과, 지역의 노동공급과 수요의 수준 및 동태적인 변화양상이 행정구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주민등록인구, 고령화비율, 경활인구 대비 대졸인구, 1인가구 증가율 등을 살펴봄
 - 주민등록인구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활발
 - 고령화비율 증가율, 경활인구 대비 대졸인구 증가율은 대도시(수도권 + 광역시)와 광역시도 간에 차이가 존재
 - 대도시 지역(수도권 + 광역시)의 고령화비율은 2000년에는 낮았으나 2017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2000년에 이미 높은 고령화비율을 보인 광역시도의 경우 기저효과로 인해 2017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보임
 - 1인 가구 증가율 또한 2000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2000~2017년 기간에 1인 가구 비율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총사업체 개수, 인당 사업체 수, 업종별 사업체 수 등을 살펴봄
 - 서울과 경기도는 총사업체 개수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서울의 경우 인당 사업체 수 역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지역의 경우 2003~2016년 간 인당 사업체 수 및 총사업체 수가 동시에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업, 서비스업, 운수업, 제조업 모두에서 2000~2016년간 사업체 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사업체 수 변화율의 경우 제주지역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사업체 수 변화율은 경기, 경남, 경북, 충북, 충남, 울산 지역이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일자리 정책 현황

가.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 현황

- ▶ 재정지원 일자리의 경우 2018년 기준 사업 수는 183개이고, 총규모는 19.2조원 해당
 - ▶ 전체 예산액 대비 상대적인 비중은 실업소득(35.4%), 고용장려금(19.7%), 직접일자리 사업(16.6%), 창업지원(12.7%), 직업훈련(10.7%), 고용서비스(4.9%) 순
 - ▶ 청년 일자리의 경우 직접일자리 10.3%, 직업훈련의 51.9% 고용서비스의 46.0%, 고용장려금의 16.1%, 창업지원의 23.2%를 차지

표 1 2018년도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현황

(단위: 억원, 개, 명, %)

대상	합계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예산액 (비중)	192,312 (100)	31,961 (16.6)	20,645 (10.7)	9,354 (4.9)	37,879 (19.7)	24,475 (12.7)	67,998 (35.4)
청년	30,126 (15.7)	3,314 (10.3)	10,708 (51.9)	4,302 (46.0)	6,115 (16.1)	5,685 (23.2)	-
사업수	183	50	51	34	19	19	10
청년	60	17	23	5	6	9	-
참여자	6,248,523	742,593	3,124,352	1,212,829	1,140,868	27,881	-
청년	1,096,898	14,442	390,861	630,424	49,798	13,121	-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효율화로 국민 체감도 높인다」의 부표 인용

-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10대 중점과제로 설정하는 등 지역 일자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 특히, 국토교통 분야의 경우 정책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전환하면서 지역 경제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

표 2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로드맵

구분	내용
1	(도시재생) 지역청년 창업공간 마련, 예비사회적기업 확산, 지역 일자리 창출 등
2	(경제거점 조성) 산업단지, 물류단지를 창업친화형으로 조성
3	(혁신일자리) 혁신도시, 새만금, 행복도시 등의 인프라 활용 일자리 창출
4	(사회적일자리) 공공임대 서비스, 사회임대주택 운영관리
5	(청년주거) 청년주택 공급, 금융지원 등 안정적 창업 취업 기반 마련

자료: 일자리위원회,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18. 5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지닌 조직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하는 등 일자리 정책이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임
- ▶ 예컨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지역별 ‘국가산단’ 조성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창출하고자 함
- ▶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상황과 정책 수요 반영이 미흡할 가능성이 존재
- ▶ 특히 지자체는 수백 개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 여러 정부부처와 협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실질적·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나.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현황

- ▶ 중앙정부는 전체 사업 대비 단독사업 비중이, 지방정부는 매칭사업 비중이 높음
- ▶ 2014년 기준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 13.9조원 중 중앙정부 단독사업은 9.8조원으로 전체 사업 대비 70.1%인 반면, 지자체 단독사업은 0.8조원으로 전체 일자리 사업 대비 6.2% 수준¹⁾
- ▶ 중앙정부 매칭사업 예산은 2.1조원으로 단독사업의 22.1%인 반면, 지자체 매칭사업은 1.1조원으로 단독사업의 130.8%
- ▶ 이와 같은 현황은 지자체가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다소 미흡한 상황임을 의미

1) 이와 같은 결과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문에서는 2018년 광주 및 성남의 예산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윤성주·김문정·김정훈,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을 참고.

표 3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예산(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2014년 예산)

(단위: 억원, %)

	합계	중앙부처			자치단체		
		소계	단독사업	매칭사업	단독사업	소계	
합계	139,737 (100.0)	119,690 (100.0)	98,017 (100.0)	21,673 (100.0)	11,361 (100.0)	8,686 (100.0)	20,047 (100.0)
직접일자리	45,733 (32.7)	29,448 (23.8)	7,962 (8.1)	20,486 (94.5)	11,087 (97.6)	6,198 (71.4)	17,285 (86.2)
직업훈련	16,418 (11.7)	15,817 (13.2)	15,604 (15.9)	213 (1.0)	4 (0.0)	597 (6.9)	601 (3.0)
고용서비스	6,529 (4.7)	5,906 (4.9)	4,536 (4.6)	1,370 (6.3)	238 (2.1)	385 (4.4)	623 (3.1)
고용장려금	21,450 (15.4)	20,845 (7.4)	20,845 (21.3)	-	-	605 (7.0)	605 (3.0)
창업지원	6,472 (4.6)	5,570 (4.7)	5,570 (5.7)	-	-	902 (10.4)	902 (4.5)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43,500 (31.1)	43,500 (36.3)	43,500 (44.4)	-	-	-	-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4,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 정재현·이상호(2016)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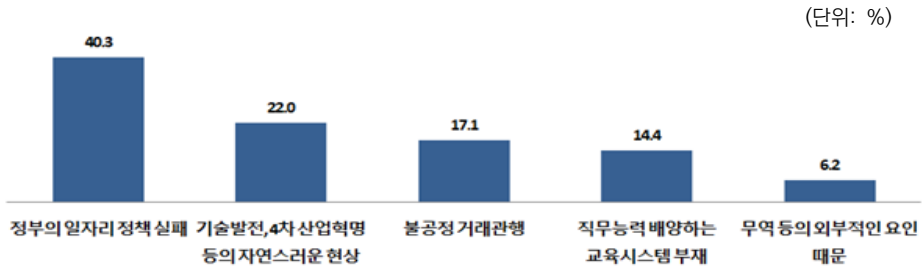
III

지역 일자리 정책 관련 사례조사

- ▶ 지역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사례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남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자체 및 고용복지+센터의 청년정책을 검토하였음
- ▶ (협업수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협업관계 및 의사교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 고용복지+센터는 명목상 협업이 가능한 공간이고 실제로 주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정책 실무진과 고용센터 일자리 정책 실무진 간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정책제안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 ▶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기적 회의 등을 통해 기관 간 협업(중앙-지방 간 협업)을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기관평가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 존재
 - ▶ 이와 같은 기관별로 상이한 성과 목표로 인한 비효율성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 간의 의견이 적절히 조율되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해질 개연성 존재
- ▶ (정보인프라) 중앙-지방정부 간 일자리 정책 내용, 집행 결과를 실시간으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전산망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 또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로 파악됨
 - ▶ 예컨대, 일모아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연구자들의 실무진 인터뷰 내용에 기반할 때, 지자체-중앙정부 일자리정책 수급자와 중앙정부 일자리정책 수급자 정보를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 도구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 실제 정책 대상자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성남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의 사업체 및 청년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노동시장 문제를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 노동시장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40.3%), '기술 발전,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22.0%), '불공정거래 관행'(17.1%), '직무능력 배양하는 교육시스템 부재'(14.4%) 순으로 응답하였음(그림 1] 참고)
- ▶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실업률이나 폐업률이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는 대상으로는, 응답 사업장의 33.6%가 대통령이나 정당, 27.9%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라고 답하였음
- ▶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 중심의 Top-Down 형태의 노동시장 정책 집행구조를 정책 대상자들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근로자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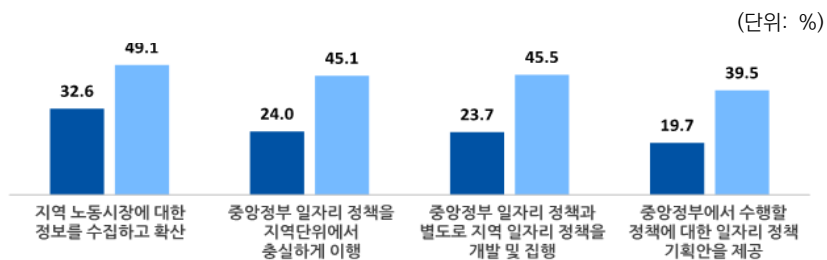
그림 1 노동시장 문제 발생 원인(사업장)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청년일자리 사업과 최저임금제 관련 사업장 설문조사」, 2018.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한편,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로자 설문결과,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확산(32.6%),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충실하게 이행(24.0%), 지자체만의 별도 정책을 개발 및 집행(23.7%),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기획안을 제공(19.7%)해야 한다는 의견 순으로 나타남(그림 2] 참고)

그림 2 지역 일자리 정책 수립 시 지방정부의 역할(근로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청년 노동시장 현황 및 중앙-지방 청년정책 관련 근로자 설문조사」, 2018.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참고: 중앙-지방 간 협업 해외사례〉

- ▶ 덴마크의 일자리 정책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견고한 사회안전망,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유기적 관계를 유지
 - ▶ 즉, 중앙정부는 노동시장 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같은 정책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 동시에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 하는 방향으로 설계
 - ▶ 지자체의 고용센터는 지역 일자리 정책을 수행·집행하는 기관으로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공 여부는 고용센터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이를 인식하고 있는 중앙정부는 지자체 고용센터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정책 교육, 정보시스템, 통계자료 등을 제공·지원하고 일정범위 내에서의 자율성을 보장
 - 또한 중앙정부와 주정부 단위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조합, 고용인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
- ▶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중앙정부가 수행하여 결정된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집행하고 있음
 - ▶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고용정책의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워진 것 또한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에 일조
 - ▶ 지방정부가 사업을 구상·제안하고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확정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함
 - 이와 같은 제안 및 집행 단계에서 지역관계자, 지역경제단체, 대학교수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가 제도적으로 존재

IV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

1. 역할분담 방향에 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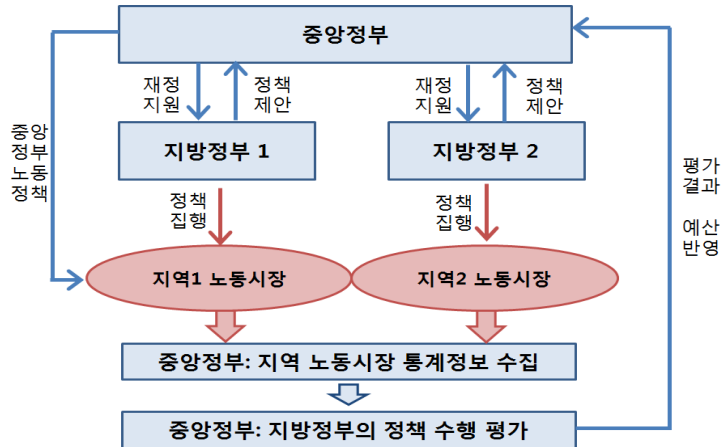
- ▶ 중앙-지방 간 역할과 책임의 분담 방향 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노동시장 정책 기획과 제안: 노동시장이 전국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 두 가지 유형으로 고려
 - ▶ 노동시장 현황 및 정책의 집행 상태 및 현황에 대한 정보수집, 배포, 공유: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통계 DB와 한국재정정보원의 D-Brain 및 e-호조의 지방재정 정보가 통합될 경우 일자리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효과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음

- ▶ 중앙-지방 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역할 분담의 구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 각 지자체는 지역의 경제 및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여 이를 토대로 수립된 일자리 사업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안
 - ▶ 중앙정부가 이러한 일자리 사업 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 후 사업 승인을 하면, 지자체는 예산이 반영된 일자리 사업을 수행 및 집행
 - ▶ 각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그 효과성에 대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다음 단계의 일자리 정책 기획 및 사업 계획에 반영

- ▶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적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 포괄보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
 - ▶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제안할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운영해본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지만, 현재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자체가 역량을 쌓을 기회가 부족

- ▶ 따라서, 기존의 일자리 정책을 균특회계와 같은 포괄보조금에 편입시킨다면 지방정부에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림 3 중앙과 지방정부 간 일자리 정책상의 역할 분담



자료: 저자 작성

2. 일자리 포괄보조금의 필요성 및 균특회계 편입방안

- ▶ 일자리 정책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에 이전재원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 재정분권 관점에서 “지자체가 굳이 중앙정부로부터 일자리 사업 재원을 받지 않고 지방세와 같은 자체재원으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 분권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와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음
 - ▶ 그러나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재정력이 수도권 지자체에 비하여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
 - ▶ 한편 재원이 풍부한 지자체의 경우, 현재의 일자리 정책의 자원 배분 구조하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인센티브가 없음
- ▶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에 이전재원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일반교부금(general grants), 국고보조금(conditional grants), 포괄보조금(block grants) 세 가지 방법이 있음

- ▶ 보통교부세와 같은 일반교부금(general grants)으로 사업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자체 재정을 지원하는 이전재원 형태
 - 그러나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전재원이 되기는 어려움
 - ▶ 국고보조금(conditional grants)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개별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하되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는 이전재원
 - ▶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은 지자체의 일반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일반교부금(지방교부세)과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조건부 사업보조금(국고보조금)의 사이에 위치한 이전재원
- ▶ 앞서 제안한 세 가지 이전재원 중 포괄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균특회계는 사업 예산의 낭비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뿐 아니라 일자리 사업과 다른 사업 간 자원 배분의 유연성·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2005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는 그 고유의 특징으로 인하여 한국형 포괄보조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첫째, 상당히 이질적인 국고보조사업 분야가 하나의 포괄보조금으로 묶여 있어 사업들 간 자원 확보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며,
 - 둘째, 개별 사업의 국고보조 사업으로서의 특징이 균특회계 내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 균특회계의 이러한 특징은 자원 배분의 유연성·효율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일자리정책은 중앙정부의 하향식(top-down) 사업 기획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여력이 없을 경우 일자리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 이와 같이 일자리 사업을 균특회계에 편입시킬 경우, 적절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
- ▶ 균특회계로의 편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은 중앙과 지자체 간 매칭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큰 직접일자리 사업군
 - ▶ 예컨대, 직접일자리 사업 중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및 자활근로 사업,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 등을 균특회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 단, 위와 같은 일자리사업을 균특회계로 편입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할 경우, 상당수 지자체가 일자리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균특회계 편입 사업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등 단계별 접근이 필요
- ▶ 일자리 정책 분권화의 1단계로서, 각 지자체가 자율적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통계지표(인구, 재정력 등)를 바탕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포괄보조금을 배분
- ▶ 일자리 정책 분권화의 2단계로서,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운영에 대한 역량이 쌓이면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

| 참고문헌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효율화로 국민 체감도 높인다」, 2018. 7. 31.
- 관계부처 합동,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 2014.
- 일자리위원회,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18. 5.
- 정재현·이상호, 「일자리 사업에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역할」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201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청년 노동시장 현황 및 중앙-지방 청년정책 관련 근로자 설문조사」, 2018. 11.

윤성주 연구위원 / 재정정책연구실(044-414-2220)
김문정 부연구위원 / 재정정책연구실(044-414-2342)
김정훈 원장 / 재정정책연구원

조세재정

Brief 2019. 3. 22(통권 제78호)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정립**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044-414-2501
- 팩 스: 044-414-2509
- 인쇄처: (주)아미고디자인

